

농수산물식품분과 운영위원회 워크숍 결과

1. 개요

□ 일시·장소 : 2019. 12. 30.(월) 10:30 ~ 17:00 / 양재 엘타워 5층

□ 참석 인원 : 12명

- (운영위원) 곽금순, 윤병선, 김경주, 길청순, 탁명구, 김재철, 허헌중(7명)
- (전문가 및 사무국) 황영모(전북연구원), 농수산물식품팀(4명)

2. 회의 결과

□ (발제) 지역 푸드플랜 현황과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(황영모)

- 전국 시도 연구원 협의회 소속 10개 연구원에서 추진한 광역 푸드플랜은 지역적인 특색에 맞춰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으로 수립.
- 지자체 푸드플랜은 커뮤니티 푸드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층위가 단층이지만 국가 단위의 먹거리 전략은 생산 시스템과 먹거리 보장, 추진체계 등 여러 층위의 논의 필요
- 국민들이 삶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실효성을 인식할 때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임.
- 먹거리 체계의 다양한 과제 중 전문가 등의 검토를 통해 핵심영역을 선정하고, 핵심영역 이외는 연계 방안으로 포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함.
-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관련 제안된 주요 의제(① 먹거리 관련 이슈와 현황 분석, ②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정책체계와 추진전략 구상, ③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전략 별 세부사업 발굴, ④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의 법적·제도적 근거 마련 방안, ⑤ 먹거리 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, ⑥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의 평가 및 관리방안, ⑦ 먹거리 관련 정책 및 예산의 분

석과 협력 조정방안, ⑧ 정부 부처간 먹거리 정책 협업 시범 프로젝트 발굴, ⑨ 먹거리 국민의식 및 정책태도 조사, ⑩ 외국의 푸드플랜 활성화 사례 조사)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종합전략을 수립하면서 분과위원회가 조정·정리해야 함.

의견)

- 기후변화 등 먹거리의 복합위기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핵심의제로 식량 안보가 포함되어야 하며, 식량자급률도 전체적인 개념보다는 품목별로 구분하여 대응하여야 함.
- 제안된 주요 의제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후속과제로 더 상세한 세부과제를 수집하여 기본방향과 계획을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함.
- 부처간 먹거리 정책 협업 사업은 정책협업의 사례를 발굴하여 가능성과 필요성을 조사하는 연구로,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키친과 독일의 마더센터 사례 등을 분석하여 법·제도 및 시행 지침의 한계와 발전 방향을 제안해야 함.
- 부처 간의 협업의 문제는 사업 중복의 문제로 드러나며 중앙부처 간의 중복과 중앙-지역간 중복됨으로 먹거리 종합전략의 큰 그림 속에서 부처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함.

□ (논의1) 2019년 정책연구용역 평가

- 정책연구용역 보고회, 토론회 등을 통해 분과위원들의 ‘국가 먹거리 종합전략’의 개념과 목표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공감대 형성
 -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체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등 대내외 공감대 형성

- 반면, 점검회의,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10여회 관련 회의를 진행했으나 수행기간이 짧고 연구용역사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음
- '19년 연구자료는 차년도 본격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'20년도 연구과제는 보고내용과 토론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연구용역 추진 필요

□ (논의2) 2020년 의제 세부과제

- (주요 용어) 제안된 정의와 연구용역의 정의를 통합해서 정리하고, 로컬푸드에 대한 추가가 필요함.
- (국가 전략 필요성)
 - 먹거리 국가 종합전략의 필요성과 현황 분석이 연계되어야 하며, 먹거리 기본권, 지속가능성, 먹거리 체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어야 함.
 - 지자체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, 부처의 지침 변경 등 국가적인 정책 수정·정리가 필요함.
- (법령 근거) 먹거리 관련 기본법으로 국가 먹거리 보장 '기본법'을 제정하고, 공공급식 관련 통합 법령 제정,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추진해야 함.
- (거버넌스 전략)
 - 로컬푸드 매장을 활용하는 식생활교육 등 각 부처별 협업이 진행되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에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제도적인 정리 필요.
 - 먹거리 관련 활동의 기반인 활동가의 발굴과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하며, 사업 추진시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함.

- 농림부 먹거리 관련 주요 사업(식품바우처 사업, 과일간식 사업,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, 로컬푸드 등)의 추진 상황을 분과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공유했으면 함.

3. 향후 추진일정

- 제5차 운영위원회 : '20. 1. 15.(수) 12시, 농특위 대회의실
 - 분과 연간 일정, 연구 용역 과제 등